

해남, 인구 10만 규모 ‘AI·에너지 미래도시’로 조성

김영록 전남지사 정책비전투어...전남연구원, 10대 전략 공개

AI데이터센터·국가 AI컴퓨팅센터 연속 유치 성장동력 가시화

해남을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심장으로 육성하고, 국내 최초 RE100(재생에너지 100%) 기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녹색명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미래 비전이 제시됐다.

전남도는 20일 해남군청에서 ‘해남군 정책비전투어’를 열고 해남의 잠재력과 산업 여건을 기반으로 한 지역 미래 전략을 발표하며 서남권 대전환의 출발점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명현관 해남군수, 김성일·박성재 전남도의원, 해남군의회, 청년과 군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은 인공지능, 에너지, 농업,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 농어촌의 새로운 모델로 변모하고 있다”며 “전남의 마지막 기회의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여는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오픈AI-SK그룹 글로벌 AI데이터센터와 삼성그룹의 2조5000억원

규모 국가 AI컴퓨팅센터, LS전선의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항만 등 대형 프로젝트가 해남을 선택했다”며 “전남도와 해남군이 수년 동안 준비해온 결과로, 앞으로 해남을 인구 10만 규모의 ‘전남 AI 에너지 미래도시’로 키워 가겠다”고 밝혔다.

전남연구원은 ‘AI·농업·문화·에너지의 미래혁신을 견인하는 대한민국 ACE 해남’을 슬로건으로 △AI 혁신거점 솔라시도 △대한민국 RE100 산단 조성 △인구 10만의 AI·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글로벌 해상풍력 핵심 전진기지 구축 △기후·스마트 녹색명 혁신 거점 △인프라 구축 및 첨단 기술 접목으로 미래 수산업 선도 △5색 5라 관광활성화 △서남해안 명품 생태정원 벨트 △서남권 대표 스포츠 진화도시 조성 △사통발달 교통망 기초인프라 확충 등 10대 전략을 제시했다.

정책토론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현장견의가 이어졌다.

송영석 땅끝농협 조합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확보를 위해 농업근로자 주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일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남군 정책비전 투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시설 조성에 도비 10억원 지원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사업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도 재정으로 1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즉답했다.

송우중 육전면 이장단장은 전남과수원구소 이전 후 기존 부지를 유통물류센터로 활용해달라고 제안했으며, 전남도는 완전이전(약 5년) 이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성향의 지방어항 지정을 요구하는 주민 건의에 대해서도 해수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조기 완공, 공공산후조리원 국비 지원 및 감면료 상향,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확대 등 지역 현안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이 밖에도 마산~산이 간 지방도 확장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다움 통합돌봄’ 고립 문제 대응 국가표준모델 주목

가족사회복지학회·서강대 사회복지연구소 등 공동 학술대회

의무방문·공동체 확장 사례 공유...경험 국가정책 방향 제시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고립·은둔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 표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20일 시청 2층 무도홀에서 ‘2025년 공동학술대회-고립과 은둔의 4가지 얼굴들’을 열고,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정책적 역할과 성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서강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복지·돌봄분야 교수, 연구자, 실무 전문가 등이 참석해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펼쳤다.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는 조지출생,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급격한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해 사회적 대안을 모색해온 17년 역사의 전국 단위 연구단체다. 서강대 사회복지연구소는 이재명 정부 돌봄국가책임제 설계자로 알려진 문진영 사회수석을 중심으로 분열·고립·외로움 등 사회적 위험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립·은둔 문제를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심리·건강·경제·사회관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지역기반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기초발표를 통해 보편적 접근의 돌봄체계, 의무방문 중심의 발굴·연계 모델, 마을공동체 기반 관계 회복 모델

을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신정 절차 없이 은둔·고립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돌봄과 지역 거점 돌봄공동체로의 확장 사례를 공유하며 통합돌봄 시행 이후 지역사회에서 나타난 변화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고립·은둔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광주의 실천 경험이 국가정책 설계와 제도화의 근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 개인 중심의 밀착지원에서 마을 중심의 공동체 돌봄으로 확장해 온 광주의 흐름이 사회적 신뢰 회복과 관계망 재구축에 기여했다는데 공감했다.

강선경 서강대 사회복지연구소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우리 사회가 돌봄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핵심 정책모델이자 방향 제시자”라며 “이번 결에서 관계를 복원해 온 광주의 경험

은 국가가 추구해야 할 돌봄정책의 표준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정영화 시 복지건강국장은 “고립과 은둔의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광주의 통합돌봄 경험이 새로운 연대와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단 한 명의 시민도 배제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존엄한 일상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공공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시행해 약 2만5000명의 시민을 지원했다. 특히 통합돌봄 시행 이후 2023년 고독사 발생 건수가 약 20% 감소하는 등 은둔·고립 가구 지원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내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돌봄 통합지원 개정안’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박미정 의원 “전국 최초 통합돌봄 조례, 전면 재정비”

박미정 광주시의원(사진)이 전국 최초로 제정했던 ‘통합 돌봄 지원 조례’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면 개정된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0일 정례회 회의에서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광주가 선도해 온 통합돌봄 체계를 국가 표준모델에 맞춰 정비하며, 지역 돌봄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서울·부산 등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됐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을 확인한 선도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번 전면 개정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상위법과 용어·체계를 맞추고,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으로 통합돌봄 범위를 확대하며 전달체계와 협의체 구성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명은 ‘통합 돌봄 지원 조례’에서



‘돌봄 통합지원 조례’로 바뀌고, 연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사회보장·보건 의료 계획과 연계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통합지원 전문인력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위원회를 ‘돌봄 통합지원협의체’로 개편해 위원 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늘려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상위법의 원칙인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조례 목적에 반영해 지역밀착형 돌봄 철학을 강화했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 통합돌봄은 이미 전국이 배우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았다”며 “법 시행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함으로써 광주의 공공·재가 기반 통합돌봄 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서용규·최지현·정다은·이명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알림

광남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취재경력기자 및 관리직 모집...28일까지 접수

창사 30주년을 맞은 광주·전남지역의 대표 정론지 광남일보가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바라는 인재들을 찾습니다. 광남일보는 그동안 비주류 편집을 통해 ‘보는 신문’의 새 지평을 열며 독자와 지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역 최고의 미디어 플랫폼을 꾸리는 광남일보에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열정과 패기 넘치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기다립니다.

- 모집대상** : -경력기자 : 0명 (취제)
-지역기자 : 곡성군(1명)
-광고사업독자팀 : 수습(1명)
- 응시자격** : -언론사(일간지 및 월간지 등) 근무 경력자 (기자직에 한함)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2차 : 심층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함·합격자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A4용지 1매 이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본인 작성 기사 사본 5건 (기자직에 한함)
- 서류접수** : -접수기한 : 2025년 11월 28일 (금)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이메일접수 (design@gwangnam.co.kr). 광남일보 홈페이지 (gwangnam.co.kr)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접수처 및 문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4층) 광남일보 총무국 ☎ 062-370-7093)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황교안 등 벌금형

법원, 유죄 판단...의원직 상실형 없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장관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겐 벌금 총 2400만원(2건에서 2000만원,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2건에서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2건에서 1000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

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상우 대전시장과 김태홍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어 “분쟁의 발단이 된 정경법안의 당부(정당·부당함)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연합뉴스

▶1면 ‘광양, 산업위기’서 계속

이런 상황에서 최근 수년간 저가 철강 수입세 확대 및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됐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고, 현지 실사,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실무 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날 광양

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양시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최대 10억원까지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3.71% 금리로 제공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대 7000만원까지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2.68% 금리로 지원한다.